# 기로에 선 한미동맹과 한국의 대북정책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본 발제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9년 4월 4일(목) 국회위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발표를 위해 준비한 것 임.

1.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위축된 한국의 중재자 역할

O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채 열렸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었던 미북 관계와 남북협력 분위기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하노이회담 결렬은 미북 정상회담을 성원했던 한국의 중재자 역할과 남북협력을 위축시켜 버렸다.

O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빅딜'(일괄타결)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겼다. 북측에 건넨 문서에는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게 넘기고, 핵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접근허용 및 해체 등 구체적이고 정교한 비핵화 관련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영변 핵시설 포기와 대북 제재완화를 위시하여 종전선언까지 기대했었을 북한은 미국 측의 예상 밖 구체적이고 치밀한 요구에 크게 당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O 제재완화와 연락사소 개설 등 미북관계의 개선을 내심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협상전략에 허를 찔린 채 빈손으로 귀국해 '자력갱생'을 호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강도'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 '경기자'(Player)라는 표현으로 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노정시켰다.

O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시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권 또한 큰 좌절감을 맛 볼 수밖에 없는 중재자(촉진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곤란해진 청와대는 중재자 보다 '촉진자'가 보다 적합하다는 다소 궁한 설명까지 내놓았다.

O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및 전문가들의 호의적 반응에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미북정상회담 결렬이 결코 중단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북한이 무력 도발의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대북 제재 확대조치를 중단시키는 등 북미관계 악화방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O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 3월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29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3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전 준비를 위해 각각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양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개념정의 및 해법을 놓고, 한미 양국이 빚어 온 엇박자와 갈등을 정리·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우선시 해 온 미국은 남북협력을 성급히 추진하려는 진보성향 문 정권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의구심과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다. 최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 여당과 청와대가 거세게 항의했던 해프닝까지 있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양국 간의 갈등 치유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2.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의 초석

O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과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볼 때, 긴밀한 한미유대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며, 양국관계를 잇는 린치핀이요, 안보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O 6·25 전쟁(1950-1953)은 한국을 떠났던 미국과의 관계를 혈맹으로 결속시켰다. 유엔참전국 중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은 누계 170만 9천 명의 대규모 병력을 한국전에 파견하여, 중·소의 지원을 받아 남침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좌절시켰다.

O 치열했던 한국전 수행 과정에서, 미국은 무려 3만 4천명에 가까운 전사자와 비전투 사망자 2만 여명, 부상자 10만 3,384명, 그리고 실종 및 포로 5천명 이상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O 한미동맹은 비전과 전략적 마인드를 지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외교업적으로 꼽힌다. 휴전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되어 올해로 66년째를 맞는 한미방위조약은 양국을 잇는 린치핀(핵심축)이요 초석이다. 양국 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어진 한미동맹은 우리가 꾸준히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요 재산이다.

O 초강대국 미국과 체결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외교·경제·군사·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기여와 공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O 미국은 휴전 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으며, 현재도 2만 8,500명의 강력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군인가족, 기업인, 유학생, 관광객 등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참고로 200만 명 이상의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O 양국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나란히 싸우고 협력해 왔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존중 등 소중한 가치들을 공유하는 맹방이다.

3. 한미동맹 균열과 대북정책 엇박자

O 정치적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는, 반미, 친북, 진보적, 좌파적 성향의 비주류 정치세력들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은 미·일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양국과 유대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간단히 사대주의자나 적폐세력으로 몰아버리기도 한다. 소위 반미자주화 세력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는 반면에, 우리 민족끼리와 남북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이념에 치우친 무책임한 주장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O 2017년 박근혜 보수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붕괴되고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

서,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보수세력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부정적 변화들이 나타났다. 한미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우선순위 및 방법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으며, 한미 간 상호신뢰에 우려스러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O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업가 트럼프는 '미국 제1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방에 대해서도 다양한 압박을 가해 왔는데, 대상에는 북한과 한국도 포함된다. 워싱턴 정계 경험이 없었던 트럼프는 외교안보 문제까지도 사업하듯 처리하고 즉석에서 결정함으로써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한국도 외교안보문제를 사업거래처럼 다루거나 성급히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신중하게 거래 할 필요가 있다.

O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 정권은 혈맹 미국의 우려와 불신을 사고, 유연성이 결여된 종군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 처리로 일본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켜 버렸다. 문 정권은 강력한 한·미·일 삼각관계 복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O 문 정권은 '사드 배치' 저지에 실패한 중국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한·중 갈등해소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경험 면에서 대중 외교를 이끌 자질을 갖춘 인물 대신, 코드가 맞는 장하성 교수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우직함과 오기를 보여 주었다. 주중 대사는 현지사정에 밝고 영향력 있는 현지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O 북한은 2006-2017년 기간에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 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계속 무시하거나 속여 왔다.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성토해 왔으나, 문 정권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 함을 미국에게 전하는 등 신중하지 못하고 순진한(?)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에 다시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입장과 대조적으로, 문 정권은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을 완전 포기 할 의사가 없음을 간과한 채, 제재완화와 남북협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교적 미숙함을 노출해 왔다.

O 한국의 강경 보수 세력이 요구하는 전술핵을 재도입 배치하는 되돌림(스텝백) 가능성은 낮으며,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더욱 생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비대칭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한을 억지 할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우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토(NATO)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자동개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미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개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O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FFVD)가 대북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이며,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는 '빅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다.

O 반면에 개발한 핵·미사일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는 북한은 단계적·부분적 '스몰딜' 해법을 고수해 왔다. 북한의 대미 외교 경험은 풍부하기 때문에, 대화나 협상장에서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북한은 필요하면 '벼랑 끝 전술'이나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능숙한 나라다.

O 중재자(또는 촉진자) 임을 내세우는 한국은 선순환적 평화협력정책과 적절한 '굿 이너프 딜'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려 하나, 미국 조야의 불편한 심기와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대미 외교 강화를 통한 빠른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O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사회와 주권국가의 특성, 패권국가 미국의 힘과 목표, 북한체제의 특성과 핵보유 집념, 이질적 남북의 특성과 위협의 성격 등을 검토분석 할 필요가 있다.

O 균열이 생긴 한미동맹을 보수하고 정상화하고 북핵 위협을 해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입장과 소견은 다양하다. 문 정권의 대미 및 대북 정책결정과 집행의 오류를 시정하고 정책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재인식과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외교적 갈등해소 모색과 전쟁

O 국제사회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으로,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세력균형이론, 정책결정이론, 동맹론, 패권주의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며, 법질서 보다 힘과 권력추구, 경험과 점진적 변화나 해결을 중시한다. 초강대국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패권국 지위를 그럭저럭 유지해 왔으나, 급성장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생존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무기 면에서 월등한 북한에 뒤지고 있어 강력한 동맹세력의 핵우산을 필요로 한다.

O 국제사회에는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중요한 행위자인 주권국가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국제사회 내에서는 국익상충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 발생과 더불어, 상호이익을 위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갈등과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국가들은 협상을 통한 해결부터 모색한다.

O 국가들이 갈등 해소와 억지에 실패하면, 무력사용이라는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쟁론을 저술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설명한다. 로마의 군사사학자 베게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미래학자 토플러(Alvin Toffler)에 의하면, 1945-1990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국가 간 전쟁과 내전이 150-160회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군인만 720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한다. 그는 전후 45년 기간의 전체 2,340주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3주에 불과하다면서 '전후'라는 말은 모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주권이 미치지 않아 질서유지가 힘든 사회이다. 극단적으로 묘사하면, 강자의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대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강하게 작용하며, 분쟁과 전쟁이 빈번한 비정한 사회이다. 강대국들은 막강한 힘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국익을 추구 할 수 있다. 반면에,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압력에 순종하든가, 타협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의 한계를 느끼는 국가는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거나, 중립적 입장을 내세워 화를 면하기도 한다.

O 이런 국제사회에도 도덕윤리와 법질서는 존재한다. 한 국가가 국제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용납 받지 못 할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나라는 국제사회의 규탄과 집단방어에 직면하게 되며, 책임자들은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어 처형될 수 있다. 추가로 유엔안보리의 개별 및 집단자위조치(헌장 51조) 조항,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사용 금지,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유린 국에 대한 규탄과 제재 결의, 기후변화 협약 등 다양한 국제규범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O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된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달아 무너지고 구소련마저 해체된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핵·미사일(신무기) 개발에 전념해 왔다.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0월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순응하는 듯 보였으나, 북한의 핵합의는 '시간벌기 전략'의 일환이었다. 2002년 10월 초 미국이 우라늄 추출을 추궁하자, 궁지에 몰린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까지 총 6회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인정하든 말든,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 핵 국가로 등장했고,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5. 미·북 사이의 불안한 한국외교

O 북핵 위협 제거와 북한 비핵화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야 가능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이나,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은 소극적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능력과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O '외교'는 국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방 정부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사나 특사 같은 전문 외교관들의 영역인 외교를 가리켜 흔히 '예술' 또는 '기술' 이라고 부른다.

O 외교적 노력의 목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윈-윈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흔히 60 : 40 정도의 비율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을 가장 바람직한 외교적 승리로 보기도 한다. 일방적 외교적 승리는 상대방의 좌절감과 적개심을 키워 보복과 전쟁의 비극을 초래 할 수도 있다.

O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의 광범위한 일괄타결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아 결렬되고 말았으나, 어느 쪽도 정상회담 중단을 말하지 않은 채 상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

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분명해졌으며, 대화 지속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개월 정도 지나 미북정상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띄웠으나, 북한의 반응을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 재개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O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한국은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같은 의욕과 여유를 잃고 말았다. 작년에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철도연결사업 시공식이 거행되었으며, 휴전선 경계초소들이 해체되고,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는 했으나, 주목할 만한 큰 진전은 없었다.

O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바라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의 강한 대북 제재 지속 의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대북 압박 지속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공조에서 이탈하려는 한국의 제재완화 요청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북한을 일사분란하게 압박하여 북한의 통 큰 양보를 얻어 내는 것으로 생각 든다.

O 문 대통령은 4월 1일 회의에서, 한미양국의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되었으나,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낙관론과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인식차가 존재함을 수긍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에 대한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로 인한 불협화음과 간극을 줄이고, 비핵화를 위해 일치된 방향으로 함께 노력 할 각오가 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6. 결론: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

O 한국은 이제 동맹국가 미국과 동족국가 북한 사이에서 국가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겠으나, 누가 맹방이고 누가 위협세력인지를 분별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은 한국을 6·25전쟁에서 구해 주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이식시켜 주었으며, 세계에서 10여 째 강대국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준 신뢰 할 수 있는 맹방이다. 반면, 북한은 동족국가지만 6·25전쟁의 참화를 안겨 주었고 휴전 후 무수한 도발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핵폭탄과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포함 일본·미국까지 위협하는 세력이다.

O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초석인 한미동맹은 한국 혼자 쉽게 대체하거나 다시 체결 할 수 있는 손쉬운 대상이 아니다. 문 정권은 이 문제를 현실주의에 입각해 냉철하게 분석·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를 신뢰하여, 5천 만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미 관계에서도 갈등과 입장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교안보는 한번 잘못 결정하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비극을 피하려면 거듭 숙고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

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나라이나,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는 적대국이다.

O 문 정권은 한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옳게 설정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성주 사드 배치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으며, 지금도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201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정부 발표를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최고통치자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 및 집행과정에서 결단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O 한국의 현 외교안보환경은 불안정하고 진로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국 한국에 특별한 배려를 베풀려 들지 않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은 일례에 불과하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린 인물이다. 중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결정되자, 돌변하여 무자비한 경제보복을 가한 G-2 국가이다. 오랜 기간 긴밀한 우방국으로 미국과 함께 한국 지원에 앞장 서 왔던 일본의 아베 정권도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로, 등을 돌리고 경제보복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외교안보는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불안하고 착잡하다.

O 문 정권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매달리기 전에, 진로와 최우선 순위를 북한 비핵화에 두고 미국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O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과감하게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끌고 도와야 한다.

O 끝으로 한국은 잘 훈련되고 경험 많은 외교안보 분야 인물들을 지닌 복받은 나라다. 코드나 여야에 관계 없이,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참모로 발굴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요 직무에 속한다. 물론 중대한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외로운 대통령의 몫이될 수 밖에 없다.

<끝>